정후식 칼럼



정후식 논설실장·이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거 안정 에 힘써야 할 공기업 직원들이 비공개 공공 개발 정보 를 이용해 불로소득을 노렸기 때문이다. 투기 의혹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 본부의 조사 대상에 오른 사람만 국회의원·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공무원 등 630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이다.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은 가뜩이나 부동산값 폭 등으로 시름겨운 서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겼다. 반칙 없는 공정사회를 약속했던 '촛불 정부'에서 발생한 비 위라는 점에서 허탈감이 더욱 컸다. 분노한 청년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신도시 개발로 수도권 집중 가속화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면서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인 '부동산 적 폐'로 규정했다. 아울러 남은 임기 동안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끊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정치권도 성난 민심을 의식한 탓인지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까 지 합의한 데 이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처벌 강화와 부당 이익 환수를 위한 법안들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

그러나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 다. 우리 사회에 부동산 투기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는 시장과 동떨어진 역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땜질식 정책, 토건(土建)에 의존하는 경기 부양 등이 꼽힌다.

'부동산 적폐'의 또 다른 뿌리

현 정부만 해도 25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 냈지만 집값 폭등은 계속되고 있다.

한데 지방의 시각에서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집값 상 승의 요인이 바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다. 이는 그동 안 신도시 개발과 투기 단속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금세 확인된다. 수도권에 신도시가 처음 추진된 것은 1989 년 노태우 정부 때다. 분당・일산 등 다섯 곳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전국에서 투기 자금 이 몰려들며 부동산값이 폭등했다. 이에 정부는 대대 적인 수사 끝에 1만 3000명의 투기 사범을 적발하고 공직자 131명을 포함해 987명을 구속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김포·판교 등 12곳에 추진한 2기 신도시 조성 때도 투기는 되풀이됐다. 정부는 또다 시 특별 단속을 벌여 9700여 명을 적발하고 300명을 구속했다. 이번 LH 사태에서도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 거래는 3기 신도시에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는 애초 경제·사회적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된 서울에 인구가 몰려 포화 상태가 되자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즉 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울 의 수요를 분산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목표였 다. 하지만 그 결과는 매양 정반대였다. 신도시 조성 때 마다 투기 열풍과 땅값·집값 상승을 불러오고, 서울 인 구 분산은커녕 지방 인구 유입을 부추겨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킨 것이다. 한편으로 투기 세력들은 수도 권 규제가 강화되면 지방을 돌며 '치고 빠지기'식으로 차익을 챙기는 등 지방 부동산시장마저 교란시켜 왔 다. 부동산 적폐의 주범이 아닐 수 없다.

수도권 집중의 대표적인 지표는 인구다. 국가통계포 털의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2606만 명으로, 전체 인 구의 50.3%를 차지하며 비수도권에 비해 30만 명이나 많았다. 수도권에 지방 인구가 몰리는 이유는 정부 부 처, 공공기관, 금융기관, 주요 대학, 100대 기업 본사 등 주요 인프라와 일자리・교육 기반이 집중된 탓이다. 한데 수도권의 면적은 국토의 11.8%에 불과하다. 전 체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에 인구의 과반이 몰려 사는 셈이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반면 지방은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갈수록 피폐해져 소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호남권만 해도 1970년 전 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4%에 달했지만 현재 는 9.8%로 급감했다. 젊은이들이 교육과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다 보니 지방대학은 입학 정원조 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남은 전국 시도 가 운데 유일하게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고,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도 18곳이 30년 내 소멸 위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러다간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괴담 이 대학뿐만이 아니라 지방 전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소멸위험지역 살려 분산 꾀해야

올해는 지방자치가 되살아난 지 30년이 되는 해이 다. 6월 항쟁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 된 이후 벌써 한 세대가 지났건만, 여러 지표에서 보듯 지방분권은커녕 중앙집권이 되레 가속화되는 형국이다. 정치권력과 자 본 및 관료 체제 등이 기득권을 형성하며 중앙집권 체 제를 강고하게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을 약속했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외려 3기 신도시 건설과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에 적극 나서면서 중 앙집권은 더 강화되고 수도권 쏠림도 심화돼 '수도권 정권'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총선 때 공언한 수 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도 감감무소식이다.

헌법 제123조 2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 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 하고 있다. 현 정부가 남은 1년 동안 부동산 부패 청산 과 집값 안정의 토대라도 마련하려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멸 위험에 처 한 지방을 살리는 재정・세제・규제 분야의 국가 지원 대 책을 담은 특별법부터 제정해야 할 것이다. 지역민들 도 차기 대선에 나올 후보자들을 지금부터 눈여겨 살펴 보아야 한다. 말로만 지방분권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 전을 실질적으로 이뤄 낼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은펜칼럼



박홍근 포유건축 대표·건축사

선거철이 되면 다양한 공약이 발표된다. 지금 서울 시장 후보로 나온 유력주자들은 '아파트 35층 룰'의 해 제와 완화를 외치고 있다. '아파트 35층 이상 불가' 규 정은 박원순 시장 시절에 만든 것이다. 정책의 방향에 따라 제도는 늘 바뀌지만, 도시는 획일성이 아니라 위 치와 주변 환경에 따라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규 제를 위한 유리천장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3년 전 일이다. 광주광역시장 취임 후 어느 조찬모임 에서 이용섭 시장께서 광주 도시 비전에 대해 언급했었 다. 내용 중 '앞으로 광주에서 30층 이상 아파트가 들어 설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귀를 의심했다. 왜 30층 이상 아파트를 못 짓게 하는 것이 주요 도시 정책일까?

지금도 광주 아파트 관련 뉴스에서 광주시장과 일부 단체의 목소리에 30층 이상 아파트는 안된다고 한다. 그들의 이유엔 무등산 조망, 아파트 장벽, 일조권, 조 망권, 무질서, 획일성, 난개발, 교통 문제, 바람길, 경 관 등등 여러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 일부는 이해되지 만, 다수는 생각이 다르다. 정해진 용적이라면 같은 높

무등산 조망과 '아파트 30층 룰'

이로 아파트 동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 동수를 줄이고 고층을 포함한 다양한 층수일 때 유리한 것들이 더 많 다. 광주에서 무등산 조망에 대한 바람은 모두가 가지 고 있지만,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인구 150만의 도시에서 무등산은 일정 장소, 특 정 거리에서라도 제대로 보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도시 경관 문제의 주 범은 30층 이상 아파트인가? 광주시에서 층수 제한으 로 도시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보행자 눈높이에서 보 이는 것을 잘 만들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행정과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50 년 후엔 거의 이곳 광주에 없다. 그렇지만 빛고을 광주 는 그때도 있다. 불필요한 담론에 빠지지 말고, 실천 가 능한 작은 정책이 더 우선이다.

첫째, 획일적 층수 제한이 아니라 총체적 높이 계획 이다. 도시는 유기체처럼 늘 변한다. 충분한 현실 인 식, 정확한 진단을 통해 종합적 도시 정책 방향을 잡 자. 지역·장소·위치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아파트 층수가 아닌 높이·조망축·바람길·녹지축 등등 다양한 요소들이 입체적으로 반영된 도시계획을 만들자. 그래 야 지금 망가졌다고 걱정하는 것들이 50년, 100년 후 다시 재생되면서 조금씩 개선될 것이다. 획일적인 층 수 제한은 더 많은 문제점을 유발한다.

둘째, 규모가 아니라 보행자 눈높이에서 디테일과 디자인을 살펴야 한다. 층수와 규모만 언급하고 아파 트 단지가 주변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높은 담장과 위압적 옹벽, 경관 훼손과 보 행 단절의 주범인 방음벽, 획일적 층수, 보행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보행로, 외부인 접근이 불가능한 녹지 등등, 이런 것들의 해결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훨씬 유 용한 정책이다. 곳곳에 산책하기 좋은 길들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아파트 디자인 개선을 우선해 야 한다. 멋진 건축은 그 자체가 좋은 도시 경관이다.

셋째, 조망 방해는 30층 이상 아파트만이 아니다. 어 떤 곳에서는 3층 건물도 경관을 가린다. 어느 곳에서는 60층 이상 건물도 무등산 조망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우리가 50년 전 광주라면 어디에서나 무등산을 볼 수 있었다.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 무등산 경관을 위 해 아파트 30층이 기준층수인가? 층수만 이야기하는 것은 총체적 도시 경관 계획이 미비함을 의미한다. 특 정 지역·위치·거리 등에서는 높이 제한을 통해 컨트롤 할 수도 있다. 그 외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용도용적제, 기타 규정에 따라 다양한 도시 경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 정책은 삶에 대한 철학과 방향성이다. 지역마 다 그들만의 특수성이 반영된다. 그러나 특수성을 잘 못 인식하여 근시안적, 획일적, 하향 평준화로 가는 도 시 정책이 되지 않길 바란다. 도시는 아파트 단지 하 나, 건축물 한 동이 아니다. 단지의 연결, 각 건축물의 특색과 조화 속에 격이 높아진다. '아파트 30층 룰'로 도시 환경이 개선되고, 무등산 조망이 가능할 것이라 는 시정 책임자의 인식에 깊은 의문을 가져 본다.

기 고



박영길 영암 국유림관리소장

"동구 밖 과수원 길 아카시아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온 산에 달콤한 아까시 나무 향이 진동한다. 어릴 적 아까시 잎을 따 친구들과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잎을 하나씩 떼어 내는 놀이를 하 던 추억이 아련하다. 그때도 척박한 비탈길에는 어김 없이 아까시나무가 서 있었던 기억이 난다.

해마다 이맘때면 아까시꽃이 피기를 손꼽아 기다리 는 사람들이 있다. 다름 아닌 봄철 내내 산불과 싸워 온 산림 공무원들이다. 아까시꽃은 산에 풀이 자라나고 나무에 잎이 돋아나 산불 위험이 다소 줄어드는 시기 에, 다른 수종보다 늦게 피어나기 때문이다.

아까시라는 이름에 대해 사람들이 나무 주변을 지나 가다가 가시에 찔려서 "아 가시야!"라고 해서 이름이

아까시나무 찬가

아카시아라고 불렀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어원은 그리스어의 'akis' (돌기, 가시)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아까시나무는 어릴 때는 가시가 많지만 크게 자란 나 무는 가시를 찾아볼 수가 없다. 나무 전체에 있는 억센 가시가 일정한 크기로 자라나면 사라진다. 뿌리를 깊 이 내리고 줄기가 굵어지고 키도 커지면 모든 가시를 버리고 의연한 자태로 우리 주변에서 도도하게 살아간 다. 어릴 적 가시는 야생동물이 잎이나 꽃을 갉아 먹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생존 전략이다.

콩과식물로 질소를 고정시켜 주는 능력이 있어 척박 한 토양에서 잘 살고 땅을 비옥하게 해준다. 목재는 크 게 자라나면 아주 단단한 특성이 있어 가구재 등 다양 한 용도로 활용된다. 다만 맹아력(萌芽力)이 강해 야 산 묘지 주변 등지에 자생하는 아까시나무를 억지로 없 애려고 베어 내면 오히려 생존 본능으로 억센 가시를 만들고 맹아가 더욱 왕성해져 한때는 가장 귀찮은 수종 으로 여겨져 왔다.

우리나라가 황폐한 산림에서 치산녹화에 성공한 나 라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산지 사방(沙防) 사업에 기여를 한 수종이 아까시나무라고 할 수 있다. 올해도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아까시나무와 같은 밀원수(蜜源樹) 3만 본을 조림했다.

북한의 산림이 많이 황폐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렇게 황폐한 산림을 복구할 때 토양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수 위주의 나무를 심는다면 녹화 성공을 장담 할 수 없다. 황폐해진 토양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그 바탕 위에 경제적으로 돈이 되는 수종을 식재해야 산림녹화가 성공한다. 우리나라 가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데 북한의 산림 복구에 크 게 기여할 수 있는 수종도 바로 아까시나무다.

아까시는 밀원 수종 중에서도 가장 많은 꿀을 생산하 고 좋은 품질을 자랑한다. 과거에는 남부 지방에서부 터 기온에 맞춰 점차 중부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꽃이 피었는데 요즘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전국에서 거의 동 시에 꽃이 피어 양봉업자들뿐만 아니라 벌들도 바빠졌 다고 한다.

올해 우리가 조림한 아까시나무도 하루빨리 자라나 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다. 아까시꽃이 피면 산불의 위험도 줄어들고 달콤한 아까시꿀은 우리에게 건강과 행복을 줄 것이다. 지금 가까운 산에 나가 우리가 흔하 게 마주해 오던 아까시나무의 그윽한 향기를 한번 맡아 보기 바란다.

社說

5·18 관련 '국정원 자료' 더 폭넓게 공개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5·18 당시 가 크다는 게 조사위의 평가다. 계엄군의 차륜(車輪)형 장갑차가 시위 현장에 투입된 사진 등을 새롭게 공개했 다. 이는 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최초 발 포 상황을 밝혀낼 수 있는 단서라는 점에 서 주목받고 있다.

국정원은 그제 1242쪽 분량의 기록물 22건과 사진 204장을 찾아내 5·18진상규 명조사위원회에 추가로 제공했다고 밝혔 다. 이들 자료에는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 정보부가 당시 국내 각 분야 동향을 수집 한 보고서와 외국 정보기관 반응 보고 등 이 포함돼 있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5·18민주 화운동 초기 계엄군이 바퀴 달린 차륜형 장갑차를 타고 광주 시가지를 돌고 있는 장면을 담은 사진들이다. 특히 차륜형 장 갑차 사진은 '최초 발포가 5월 19일 오후 광주고 앞길에서 바퀴가 고장 난 차륜형 장갑차에서 이뤄졌다'는 진술과 문헌 내 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서 그 의미

또한 당시 차륜형 장갑차나 코브라 헬 기 투입 등 계엄군이 전력을 강화하게 된 계기가 '시민군의 차륜형 장갑차 탈취' 때 문이었다는 그동안 신군부 측의 왜곡된 주장을 뒤엎을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도 의미가 있다. 이번 사진을 통해 궤도식 장갑차에 비해 성능이 뛰어난 차륜형 장 갑차를 계엄군이 이미 운용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들 자료들에 대해 검증 절차에 착수한 만큼 5·18 당시 최초 발포 상황과 코브라 헬기 투입 과정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국정원은 5 •18 진상 규명을 위해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자료를 공개했지만, 진상조사위에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한계를 생각할 때, 앞으로 관련 단체와 소통을 통 해 보다 많은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했으면 한다.

'공무원이 약간 힘들어야 시민이 편해진다'

광주 지역 5개 구청이 오는 5월1일부터 인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점심시간에 민원 업무를 중단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모 든 자치구(군)가 점심시간 민원 업무 중 단을 결정한 곳은 광주가 처음인 것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는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에 '점심시간은 12시부 터 13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전공노 측은 "5개 구청의 통일된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시민 혼 선을 줄이고 적절한 휴식시간으로 공무원 들의 업무 효율을 높여 시민들에게 양질 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노조 측의 결정에 따라 다음 달 부터는 광주 지역 모든 구청 민원실과 동 복지센터가 낮 12시~오후 1시 사이에 출 입문을 닫고 민원서류 발급 등의 업무를 전면 중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 원을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해 왔던 직장

문제는 구청 민원실과 모든 행정복지센 터에서 시행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 입하기 전 이와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 수 렴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 초 노조와 이 제도 도입에 합의했던 각 구 청들은 아직 시행 시기가 합의되지는 않 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5개 구청과는 달리 광주시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은 '세상이 바뀌었지만 공무원 은 여전히 국민의 공복'이라며 '공무원이 약간 불편해야 시민이 편해진다는 공복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게다가 앞서 시범적으로 점심시간 휴무 제를 도입했던 일부 자치단체는 점심시간 직전에 민원인이 몰려드는 등 각종 부작용 이 발생함에 따라 추진을 중단한 사례도 있 다. 따라서 구청과 공무원노조는 시민 편의 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최선의 방법이 무 엇인지 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

'이도류' 선수

'이도류' (二刀流,にとうりゅう) 는양 손에 칼을 한 자루씩 쥐고 싸우는 검법이 다. 야구에서도 쓰이는데, 양손 타자인 '스위치히터'가 아니라 '투타 겸업 선수' 를 일컫는다.

40년 역사의 한국 프로야구에선 딱 두 번 이도류 선수가 있었다. 개막 원년인 1982년 해태 타이거즈 김성한 선수가 첫 번째 주인공이다. 당시 타이거즈 선수는 14명뿐이었다. 이 때문에 김동엽 감독이 고교 시절 투수로도 활약했던 김 선수에 게 투타 겸업을 권유했는

데 기대 이상이었다. 김 선수는 타자로 13홈런, 69타점(1위), 3할5리의

전 남 본 부 220-0642

타율을 기록했다. 투수로도 10승 5패에 2.88의 방어율로 '10승-10홈런-3할 타 자'라는 국내 프로야구에 전무후무한 진 기록으로 남았다.

1986년에는 OB베어스 박노준이 이도 류로 뛰었지만 성적은 별로였다. 입단 첫 해 2.28의 방어율로 투수로는 양호한 성 적을 거뒀지만 타자로는 1할대의 타율에 머물렀다. 그는 2년간 투타 겸업을 하다 주전 중견수로 자리 잡아 1994년 골든글 러브를 수상하기도 했지만 투타 겸업에

따른 혹사로 더 이상 큰 활약은 없었다.

프로야구에서 이도류로 성공한다는 것 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선수 층이 얇던 1980년대에나 가능한 일이었 고 갈수록 전문화되는 현대에는 굳이 이 도류가 필요하지도 않다. KT위즈의 거포 강백호가 2018년 올스타전에서 투수로 깜짝 등장해 150km의 강속구를 던졌지만 순전히 이벤트성이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오타니 쇼헤이 선수 (LA에인절스)가 이도류 열풍을 일으키

고 있다. 오타니는 5일 열린 경기에서 선발투수 와 2번 타자로 나서 118 년 만에 메이저리그 역사

초에 시속 163km의 강속구를 뿌리더니 1 회 말에는 타구 속도 185.4km의 137 m짜 리 대형 홈런을 날렸다. 아메리칸리그가 1973년 지명타자 제도를 도입한 이래 선 발투수가 홈런을 친 것도 그가 처음이다.

를 다시 썼다. 성적도 인상적이었다. 1회

팬들은 100년 전 이도류로 활약했던 베 이브 루스가 환생한 것처럼 열광하고 있 다. 한국 프로야구에서도 언젠가 이도류 선수를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장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光则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 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정 치 부 220-0632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체 육 부 220-0621 사 회 부 220-0652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